

'아리셀 참사' 위법 줄줄 나오는데 국회 뭐하나... "당장 박순관 국감 증인 채택" 애타는 유족들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10.11 12:00

박순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 국회 기자회견
 "참사책임' 박순관, 25일 환노위 종합감사 불러내야"
 "한국 국회는 사람 죽어나도 외면합니까" 유족 절규



11일 오전 9시 국회소통관에서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정혜경 국회의원이 박순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송승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110일을 맞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사 책임자 박순관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를 채택하지 않았다. 참사 피해자 유족들과 참사 대책위는 이를 두고 "23명의 죽음에도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는 국회"라고 규탄하면서 박순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즉각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11일 오전 9시 국회소통관에서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정혜경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유족들은 어제(10일) 참사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에스코넥 앞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아리셀과 에스코넥 불법파견과 위법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제는 군납 배터리 비리 조작 의혹이 드러나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순관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현재 에스코넥은 피해자 유족과의 교섭을 거부중이다.



11일 오전 9시 국회소통관에서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정혜경 국회의원이 박순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송승현

이같은 상황이 국정감사 시기 펼쳐지는데도 국회 환노위에서 박순관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두고 유족과 대책위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순관을 대표를 국회로 불러 감사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우선 환노위의 한 의원으로서 저부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가 나서서 다시는 아리셀과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 파견의 진상을 파헤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험이 떠맡겨지는 현실을 돌아보고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순관 대표에게도 몇 달간 감옥생활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25일 종합감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환경노동위원회가 박순관 대표를 국정감사의 장으로 부를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들의 결단을 촉구드린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유족의 요구를 외면하는 22대 국회 환노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제라도 아리셀 박승현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추가 증인 채택으로 세우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한 뒤 “아리셀 참사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군납과 방위산업의 문제였기도 했다. 만약 이 참사가 군부대에서 일어났어도 국회가 외면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어나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없는 정부와 국회가 살인 기업을 방치하는 것을 유가족과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고 했다.



11일 오전 9시 국회소통관에서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정혜경 국회의원이 박순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송승현

희생자 엄정정 씨의 어머니인 이순희 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가슴을 치면서 “참사 이후 110일이 자났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에스코넥 앞에서 울고 떠돌고 있어야 하나. 명백하게 죄가 드러난 박순관을 왜 국감 증인채택 하지 않는건가. 한국 국회는 사람 목숨을 이렇게 취급하나”고 오열했다.

법률지원단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유례없는 산업재해 참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7월 초 이후 처음으로 9월 말일 에스코넥이 보내온 공문의 내용을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에스코넥은 유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배보상도 더 제안할 수 없고, ‘대형참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도 줄 수 없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니 징벌적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거라고 했다”면서 “회사가 이렇게 까지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에서는 ‘이래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진관 증인 채택은 필요하다”고 했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